

## 기독교와 정치: 20대 대선 국면에서 생각하다

최형묵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 / 기독교윤리학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 대선으로 불릴 만큼 부정적 시선이 따갑다. 유력 후보 본인들의 개인사와 공직에서의 역할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 배우자의 문제가 부각되고, 여기에 대통령 후보자에게서 보기 드문 극언과 실언, 각종 구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바람에 우리 사회 구성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을 겨루는 선거 본연의 성격은 사라지고 상대 후보를 향한 인신공격성 의혹 제기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치인을 향한 높은 도덕성의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정치세력이 경합하는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정치인에게 정말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여러 사회 계층과 세력들이 갈등하는 현실에서 다수의 구성원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책 실현의 의지와 예측,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하는 정책 제시와 그것을 실현할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책임윤리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개인적 도덕성 논란과 각종 구설수가 전면에 두드러진 지금 대선국면은 그 중요한 판단기준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어 안타깝다. 전환기 한국사회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정책과 그 실현 방법을 둘러싼 쟁론이 부차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정책을 둘러싼 대결이 뒷전으로 밀리고, 이른바 생활밀착형 공약을 빌미로 성별·세대별 편 갈라치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선거전은 이후에도 큰 부담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편 갈라치기로 결집효과를 거두게 되면 투표율은 높아질지 몰라도 선거 이후에도 각 진영 간 양극으로 통합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더 나은 미래사회를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

기독교와 정치 또는 종교와 정치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특정 후보를 두고 목사들이 안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후보가 무속신앙에 기대는 행태가 쟁점이 되는 와중에 다시 특정 기독교 세력이 그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종교의 매우 부적절한 관계를 함축하는 사태로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오늘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늘 벌어지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를 진단해 볼 수 있다.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의 종교화와 동시에 종교의 정치화를 배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곧 그것은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다든지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정치의 종교화는 정치가 권력의 강화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한다든지 간섭하는 행위를 뜻하며, 종교의 정치화는 종교가 정치권력에 기대어 특권화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그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양자의 건전한 관계를 지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치와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편 배타적 세계관에 좌우되지 않는 투명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지향하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바로 그 원칙에서 볼 때 앞에서 예를 든 사례들을 모두 부적절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무속신앙에 기대는 것은 신비한 종교적 아우라를 억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바람직한 사회를 향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기 위해 종교적 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

니다. 단지 무속인과 결탁되어 있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다. 엉뚱한 주술적 믿음으로 혹 세무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이다. 이로써 시민적 책임의식에 따른 정치적 선택행위를 흐리게 한다. 이는 정치인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특정 정치인에게 다짜고짜 안수를 해댄 행위는 해당 목사들 스스로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그것은 종교인으로서 적절한 조언을 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과는 다르다. 특정한 종교적 예식으로 행해져야 할 일을 마땅히 그런 자리도 아닌 자리에서 했을 때 그 숨겨진 저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신의 영광을 임의로 도용해 왔을 때, 숨은 야욕은 거꾸로 장차 그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살 만한 행위이다.

특정 종교 세력 곧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사태는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 서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닌 바에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른 결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든 종교인의 입장에서든 그와 같이 파당적인 이해관계로 결합할 경우 그 결과가 보편적 공공선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어지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

그렇다면 정치와 종교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까? 정교분리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상관없다든지 종교인의 정치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현존하는 한 정치적 참여는 필연적으로 요청받는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주권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바로 그 신앙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신앙에 근거하여 공공적 책임의 일부로서 정치적 참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 근거로서 하느님의 주권 개념은 지상에서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흔히 고대 근동에서 신의 주권은 지상의 권력을 정당화는 근거가 되었으나 성서에서 하느님의 주권은 권력을 제한하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사회 안에서 지배와 억압을 부정하고, 따라서 하느님 앞에서 그 백성이 모두 동등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은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등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예컨대 사사 기드온 이야기(사사 8:22~23), 왕권체제의 수립 요구에 맞선 사무엘의 경고(삼상 8:4~17)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은 그 정신을 따라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명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은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주권 개념을 이어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로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었고, 그것이 세상의 통치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한 비판(마가 10:42),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요한 18:36)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준다. 종종 가이사와의 것과 하느님의 것에 대한 논란(마가 12:13~17; 마태 22:15~22; 누가 20:20~26)은 흔히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병존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황제의 것에 골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의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하느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세계에 대한 전망을 함축한다.

오늘 하느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피조세계 전체에 구현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인식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민중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로마 8:18 이하). 정치경제적 불의와 생태적 위기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같은 뿌리, 곧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비롯되는 위기의 현상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를 동시에 구현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 민주적 헌정국가 안에서 종교의 역할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근원적으로 신앙의 요청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동

시에 오늘날 민주적 헌정질서가 추구하는 정교분리의 취지에 따라 규율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과 그 표현방식은 신앙의 요청에 부합하는 동시에 오늘 민주 헌정국가 안에서 보편적 가치와 그 소통방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만의 세계관적 독단에 따라 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기 다른 세계관을 지닌 사회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입장을 개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은 신앙이 그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사회구성원들에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앙의 요청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요청을 당대의 역사·문화적 환경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음이 펼쳐져야 할 장으로서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당대 사람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언제나 당대의 현실 가운데서 구체화되고 육화되어온 역사를 환기하여야 한다. 복음의 그 육화과정을 외면할 때 교회는 독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국가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조건에서라면 그 독단의 파괴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가권력과 교회가 분리된 조건에서는 교회의 신뢰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은 사회적 영향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더욱 절박하게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조건에 처해 있는지, 그 조건 안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헤아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교회는 다종교 사회 상황을 유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 종교가 국교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시민사회 안에서 스스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믿음의 체계는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이기에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가치체계와 접촉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종교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태도는 스스로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 된다. 배타적 진리 주장을 외치는 종교보다는 포용력을 지닌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현실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그 대화와 협력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협력의 방향이 사회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환기 한국사회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이 안 보이는 20대 대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신앙에 근거하되 동시에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한 공공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하여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대 대선과정을 냉혹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논란이 압도하면서 선명한 정책대결의 과정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예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 자체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이른바 생활밀착형 또는 소확행을 지향하는 공약은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약은 오히려 성별·세대별 갈라치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탓에 근시안적 득표 전략에 유리할지 모르나 결코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지금 한국 사회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이른바 추격국가로서 경제성장에 몰입해왔던 시절을 지나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으로서 선도국가의 역할을 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선거는 그 전환기에 걸맞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계기이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주화를 일궈냈지만, 그 명암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회이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는 말할 것 없거니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 극복,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정착, '신냉전'으로 일컬어지는 정세 가운데서 질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과제, 그리고 이 모든 과제를 원활히 감당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 이번 대선은 이와 같은 과제들을 감당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 공통의 과제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제이다. 현재 대선국면에서 여타의 후보들에게서는 이와 관련한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을 볼 수 없는 반면 민주당(2050년 탄소제로, 기후에너지부 창설, 신재생에너지와 소비를 연결시키는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세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 플라스틱제로 등)과 정의당 후보(탈핵과 석탄발전 종료, 재생에너지 50% 전력생산, GDP의 2% 녹색 전환 투여 등 가장 포괄적인 환경정책)에게서 그나마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정도이다. 오늘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오늘 자본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그 체제의 전환 전망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의미있는 정책들도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의 연장선상에서 기술주의적 접근의 한계 안에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체제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지 생태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그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그 해법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법과 긴밀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은 대다수가 가장 절박하게 체감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선거 국면마다 등장하는 경제위기의 논리는 기만이요 허구이다. 문제는 불평등이며, 따라서 사회적 위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자본소득분배율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그 격차가 유난히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격차까지 더하면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사회는 애초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은 말할 것 없고, 노동시장 자체마저 심각하게 분절되어 있어 다양한 층위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뿐 아니라 비정규직 내에서의 여러 균열 현상이 심각하다. 이동노동자,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이다. 특별히 코로나19 위기로 사회적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도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여 한국형 복지 국가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의 규모는 성장했지만 기존의 복지 유산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사회 안에서 고유한 복지체제를 형성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 또는 기본소득은 양자택일의 사안이라기보다 충분히 수렴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그 실현과정에서 적절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도 중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에 편승하는 사회적 차별의 극복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른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의 위상 전환의 과제는 경제적 성장의 차원으로 국한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형성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예컨대 인권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불평등구조

에 따른 심각한 노동의 위기와 차별은 말할 것 없거니와 성차별 양상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역시 심각하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는 뒷전으로 밀려 있고 오히려 혐오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사회통합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그 위험한 조짐이 보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넷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은 두말할 것 없는 숙원과제이다. 분단과 극한적인 전쟁의 경험은 남북 간 갈등의 비극 그 자체로도 문제려니와 이후 한국사회의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되어 왔다. 분단의 상황이 때로 민주화와 평화를 향한 강렬한 열망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부조리한 체제와 현실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 역대 민주정부하에서 일관된 남북화해의 시도, 그리고 가깝게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은 남북 간 갈등을 끝내고 평화적 관계를 이루게 되리라는 기대를 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지고 지금 남북관계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로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자 해도 국제적 역학 관계 안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며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판이니, 상황은 더욱 난망하다. 일관된 평화의 의지와 더불어 담대한 상상력으로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단순히 국력의 위세를 과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견국가로서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강대국의 세력 각축이 벌어지는 최일선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늘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과거 불리했던 그 요인을 능동적인 역할을 펼치는 지렛대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별히 신냉전체제로 불리는 국제적 역학관계 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친미 또는 친중 가운데 어느 일변도로 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 가운데 국제관계 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그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전 촛불민의를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낙관적 기대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우익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을 안도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렇게 기대되었던 민주주의가 매우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촛불정부로 일컬어졌던 정부하에서 이렇다 할 만한 개혁적 성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재벌, 금융, 행정, 사법, 언론 등 여러 분야의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선출권력을 무력화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 실상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의 후보대결에서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기득권 카르텔의 한 축을 맡은 세력이 정부의 무능을 앞세워 표심을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강화한 세력이 오히려 공정을 내세우며 의기양양한 꼴이다. 일종의 도착적 증상이며, 그 증상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의 기본권과 대표권을 강화하며 동시에 권력을 견제할 방안이 절박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전환기의 한국 사회의 과제가 이뿐일까?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대략 큰 그림의 윤곽을 그리는 정도로 그 과제를 예시했을 뿐이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어떤 정치세력도 이런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후보들의 공약 차이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언론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당장의 근시안적 득표 계산 때문에 선도적 의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저 도토리 키 재기와 다름없는 공약들만 견주는 가운데 편 갈라치기로 대선이 귀결된다면, 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든 그 결과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난 5년간의 무력함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기득권 카르텔을 강화하여 퇴행하는 사태로 귀결되어서야 되겠는가?

## 기존의 정치구도를 뒤흔드는 주권자의 역할

지금 우리는 엄중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다. 정작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당사자들과 그 정치세력은 마치 스포츠 경기 치르듯 그 중대사를 희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현재 정치세력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사로서 이를 받아들이는 절박감이 있는지 의문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가늠하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

며, 냉소하는 태도로 관망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동시에 책임 있는 주권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치 세력이 짜놓은 구도 안에서 세력을 결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구도 자체를 뒤흔드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

## 최 형 목

현재 천안살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민중신학회장, NCKK 정의평화위원장, 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민중신학의 입장에서 계속 연구와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근대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평가』 등 여러 저서와 역서가 있다.